

헌법집중 Keynote(제2판) 추록

P 031 Ⅲ. 1. 본문 내용 수정 (2024. 3. 공직선거법 개정_지역구 국회의원·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조정)

헌법 제41조 제2항은 “국회의원의 수는 **법률로** 정하되, **200인 이상**으로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고,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“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다.

P 060 V. 논점세트 마지막 줄 내용 수정 (대법원 판례 반영)

“변호권” 기본권설 cf. “접견권” 성격 혼재

P 062 (2) 단락 본문 첫째 줄 ⑤ 내용 대체 (대법원 판례 반영)

⑤ 한편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등을 조력할 권리와 관련하여, 헌법재판소는 종래 “**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**은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**법률상 권리**에 불과하다” 고 판시하였으나(1991.7.8. 89헌마181), 이후 “**변호인의 조력권 중 변호인의 변호권**(변호인의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 수사기록 중 고소장·피의자신문조서 열람권,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신문참여권)과 **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**은 조력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실현을 위하여 **헌법상 기본권**으로 보장되어야 한다” 고 판시하였고(2003.3.27. 2000헌마474; 2017.11.30. 2016헌마503; 2019.2.28. 2015헌마1204), 대법원은 “**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(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)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**으로 보장되고 있다(헌법재판소 2017.11.30. 2016헌마503 결정, 헌법재판소 2019.2.28. 2015헌마1204 결정 등 참조)” 고 판시하였다(2022.6.30. 2021도244).